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2018년 남북정상회담 진단과 과제

목 차

■ 2018년 남북정상회담 진단과 과제

Executive Summary	i
1. 개요	1
2. 2018년 남북정상회담 진단	2
3. 시사점과 과제	8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괄 :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통일연구센터 : 이 해 정 연 구 위 원 (2072-6226, hjlee@hri.co.kr)

 이 용 화 연 구 위 원 (2072-6222, yhlee@hri.co.kr)

Executive Summary

□ 2018년 남북정상회담 진단과 과제

■ 개요

2018년 남북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하 판문점 선언, 전문과 3조 13개항)에 전격 합의하였다. 금번 남북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를 비롯해, 한반도 항구적 평화정착의 계기로 작용했을 뿐 아니라, 남북경협 재개를 통한 남북 공동의 경제공동체 형성 기반에 초석을 다졌다고 평가된다. 특히 앞으로 있을 북미정상회담 등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회담에 있어 '대전환의 초석'으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 2018년 남북정상회담 진단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남북정상은 11년 만에 기존 합의를 재확인하는 한편, 이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실현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비핵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함으로써 정부의 '한반도 운전 자론'과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 추진을 위한 설득력과 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만들어 나간다는 남북정상 간의 공감대 형성과 명문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대내외에 과시하였다는 의미가 크다. (남북관계 개선) 사회문화 부문에서는 다방면의 교류 활성화, 인도주의 부문에서는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 합의, 경협 부문에서는 공동 번영을 위한 10.4 선언 합의 추진에 대해 명문화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시사점과 과제

남북간 합의만큼 중요한 것은 이를 이행하는 절차와 속도에 있으며, 합의 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 및 국민적 공감대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합의→이행→신뢰 구축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남북간 합의는 반드시 이행된다는 신뢰 구축 노력을 통해 향후 남북관계가 안정적으로 지속된다는 상호 확신이 필요하다. 둘째,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제도화 노력이 필요하다. 「남북기본협정」 체결 등 제도화를 위한 후속 논의를 통해 남북관계 지속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관계 복원을 위한 단계적 추진 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 복원 및 남북경협 재개를 위해서 재개의 단계를 고민하는 속도 조절도 필요하다. 넷째, 국민적 공감대 제고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남북간 합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남북관계 개선 및 경협 재개가 한반도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된다는 공감대 형성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합의 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북제재 국면에서 남북경협 재개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다.

1. 개요

- 2018년 남북정상회담은 남북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남북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
 - 남북정상이 11년 만에 기존 합의를 존중한다는 의지를 상호 확인하고,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환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
 - 올 가을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포함하여 남북정상의 정기적 회담과 직통전화 설치를 명문화함으로써 남북정상간 회담의 정례화 및 체계화의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음
 - 28년간 지속된 북핵 문제와 65년간의 정전상태에 대한 남북정상간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였다는 데 의미가 큼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함으로써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과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 추진을 위한 설득력과 동력을 확보
 - 향후 북핵문제 해결은 물론, 남북관계 개선 및 남북경협 재개를 위한 우호적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평가
- 본 보고서에서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사안별로 진단하고,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
 -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남북관계 개선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남북간 기존 합의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하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살피고자 함

< 역대 남북정상회담 개최 현황 >

구분	남한	북한	장소	결과
2000. 6.13~15 (2박 3일)	김대중 대통령	김정일 국방위원장	평양	6.15 공동선언 (5개 기본조항)
2007.10.2~4 (2박 3일)	노무현 대통령			10.4 공동선언 (8개 기본조항)
2018. 4.27 (1일)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전문 및 3조 13개항)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2. 2018년 남북정상회담 진단

- (북한 비핵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함으로써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과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 추진을 위한 설득력과 동력을 확보
 - 28년 만에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의 내용을 남북정상이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
 - 이번 합의를 계기로 북핵 문제 해결 및 6월 초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성실한 운전자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
 - 향후 남북관계 개선 및 남북경협 재개를 위한 우호적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평가
 - 북한의 성의있는 비핵화 의지 표명이 향후 남북관계 개선 및 남북경협 재개에 필수적이라는 국제사회와 국민적 인식이 존재
 - 판문점 합의를 계기로 남북관계가 근본적 변화를 맞게 되었으며, 이번 합의가 향후 남북관계 복원에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역대 남북 주요 회담에서 다뤄진 북한 비핵화 관련 조항 >

구분	주요 내용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1991. 12. 31)	제1항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2007.10.4)	제4항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판문점 선언 (2018.4.27)	제3조 제4항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자료 :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역대 남북정상회담 선언문을 토대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1991년 12월 31일 대한민국 정원식 국무총리와 북한 연형묵 정무원 총리는 판문과 6개항의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서명.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계를 만들어 나간다는 남북정상 간의 공감대 형성과 명문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대내외에 과시

- 남북기본합의서 및 10.4 정상선언에서 합의된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논의가 진전된 것으로 분석
 - 남과 북은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남북한 공동 번영을 위한 큰 틀의 합의 도출
- 65년 전 한반도를 둘로 가른 정전협정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남북정상은 항구적 평화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초석을 다진 것으로 평가
 - ‘비무장지대(DMZ)의 실질적 평화지대화’ 및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의 평화수역화’ 등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하는 한편, ‘한반도 新경제지도’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이 조성된 것임
 - ‘한반도 新경제지도 구상’은 동해권, 서해권 등 권역별 남북 협력 벨트를 마련하고, 동서를 잇는 이른바 ‘H 경제 벨트’를 조성해 장기적으로는 남북 시장통합, 즉 경제통일을 이룬다는 구상
 - *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 금강산, 원산·단천, 청진·나선을 남북한이 공동개발해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
 - * 서해권 산업·물류·교통벨트 : 수도권, 개성공단, 평양·남포·신의주 연결 서해안경협벨트 건설 및 경의선 개보수, 서울-베이징 고속교통망 건설로 중국 주요도시와 1인 생활권 구축
 - * 동해·DMZ 환경·관광벨트 : 설악산·금강산·원산·백두산 관광벨트 구축 및 DMZ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 개발

< 역대 남북 주요 회담에서 다뤄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관련 조항 >

구분	주요 내용
남북기본합의서 (1991.12.13)	제5조 남과 북은 현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2007.10.4)	제4항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하 생략)
판문점 선언 (2018.4.27)	제2조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제3조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자료 : 남북기본합의서, 역대 남북정상회담 선언문을 토대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1991년 12월 13일 대한민국 정원식 국무총리와 북한 연형묵 정무원 총리는 4장 25조의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에 서명.

○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대전제 하에, 사회문화 부문에서는 다방면의 교류, 인도주의 부문에서는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 남북경협 부문에서는 공동번영을 위한 10.4선언 계승을 강조

- (사회문화 교류)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는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확대를 위해 다방면적인 사회문화 교류 필요성을 제시
 - 특히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을 사회문화 협력의 주체를 표기하는 등 구체성을 확보했고, 시기 또한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 및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 특징
- 향후 남북관계 개선과 민족 동질성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
 - 사회문화 교류는 기타 남북 협력에 비해 추진이 용이한 부문이 많은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시 남북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 역대 남북 주요 회담에서 다뤄진 남북관계 개선 관련 조항_사회·문화 >

구분	주요 내용
남북기본합의서 (1991.12.13)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 기술,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6.15 남북공동선언 (2000.6.15)	제4항 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2007.10.4)	제6항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하 생략)
판문점 선언 (2018.4.27)	제1조 제4항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u>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u>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 북에 <u>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u> 밖으로는 2018년 <u>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u>

자료 : 남북기본합의서, 역대 남북정상회담 선언문을 토대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 (인도주의 교류) 남북정상은 고령의 이산가족들의 생애 상봉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 8.15 광복절을 계기로 상봉 재개에 합의
 -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실향민을 언급하는 등 이산가족 상봉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음
 - 이번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2015년 이후 약 3년 만에 ‘8.15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되어 이산가족들의 애환을 풀어줄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

- 이번 이산가족 상봉 합의는 고령의 이산가족들에게 상봉 기회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의 초석으로도 작용될 가능성이 높음
 - 남북정상 모두 이산가족 상봉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만큼 향후에도 이산가족 상봉은 지속 추진될 것으로 전망
 - 특히 8.15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향후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대규모 상봉 등의 방식이 논의될 가능성이 존재

< 역대 남북 주요 회담에서 다뤄진 남북관계 개선 관련 조항_인도주의 >

구분	주요 내용
남북기본합의서 (1991.12.13)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6.15 남북공동선언 (2000.6.15)	제3항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2007.10.4)	제7항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판문점 선언 (2018.4.27)	제1조 제5항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자료 : 남북기본합의서, 역대 남북정상회담 선언문을 토대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 (남북경협)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며,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우선 추진한다는 합의를 통해 新남북경협 추진의 토대 마련
 - 이는 정부의 ‘한반도 新경제지도 구상’과 북한의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2010~2020)」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사업들로 향후 남북경협 추진을 위한 큰 틀의 합의 도출 가능성도 남아있음
- 특히, 남북간 물류망 연결을 1차적 과제로 제시한 것을 계기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新북방정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남북간 물류망 연결을 통해 우리의 경제 영토가 사실상의 섬나라에서 대륙 경제국가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남북한 경제 모두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 북한은 경제개발 10개년 계획을 통해 ‘신의주-남포-평양’의 서남 방면과 ‘나선-청진-김책’으로 이어지는 동북 방면의 양대 축을 개발한다는 계획
 - *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은 기반시설 확충,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개성공업지구 1단계 완공 및 2단계 개발 착수, 남북간 철도·도로 개보수,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협력사업 추진, 백두산관광 실시 및 이를 위한 백두산-서울 직항로 개설 등임

< 역대 남북 주요 회담에서 다뤄진 남북관계 개선 관련 조항_남북경협 >

구분	주요 내용
남북기본합의서 (1991.12.13)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 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6.15 남북공동선언 (2000.6.15)	제4항 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2007.10.4)	제5항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하 생략)
판문점 선언 (2018.4.27)	제1조 제6항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자료 : 남북기본합의서, 역대 남북정상회담 선언문을 토대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 (종합평가)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남북정상은 11년만에 기존 합의를 재확인하는 한편, 이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실현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

- 남과 북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민족의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원칙을 명문화한 것은 향후 남북관계는 물론, 북핵 문제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됨
 - 특히,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의 평화수역화, 10.4 선언에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을 명문화한 것은 정부의 '한반도 新경제지도 구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보임

< 역대 남북 주요 회담에서 다뤄진 내용_북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남북관계 개선을 중심으로 >

구분	남북기본합의서 (1991.12.13)	6.15 남북공동선언 (2000.6.15)	10.4 남북정상선언 (2007.10.4)	판문점 선언 (2018.4.27)	
북한 비핵화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1991.12.31)	-	한반도 핵문제 해결 노력	남과 북의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평화상태 전환 노력	-	정전체제 종식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노력	정전상태 종식 및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개선	사회문화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 협력 실시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	민족 역사와 문화를 빛내기 위한 교류 협력 발전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 고조위해 다방면 협력 활성화
	인도주의	이산가족 상봉 및 인도적 문제 대책 강구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	인도주의적 협력사업 추진	인도적 문제 시급히 해결, 이산가족 협의 해결
	남북경협	민족경제의 균형 발전		민족경제의 균형 발전과 공동 번영 도모	민족경제의 균형 발전과 공동번영 도모

자료 :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역대 남북정상회담 선언문을 토대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3. 시사점과 과제

□ 남북간 합의만큼 중요한 것은 이를 이행하는 절차와 속도에 있으며, 합의 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 및 국민적 공감대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① 합의→이행→신뢰 구축의 선순환 구조 구축 : 남북간 합의는 반드시 이행된다는 신뢰 구축 노력을 통해 향후 남북관계가 안정적으로 지속된다는 상호 확신이 필요
 - 2018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마련된 남북관계 개선의 새로운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도록, 상호 합의 이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이를 위해 정상회담의 정례화 및 후속 논의의 체계화를 도모
- ②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제도화 노력 : 「남북기본협정」 체결 등 남북관계의 안정적·지속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남북관계가 정치적 상황에 의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화를 통한 지속적인 이행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실천
 - 남북정상간 합의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지역 설치를 통해 이행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음
- ③ 단계적 추진 목표를 수립 : 남북관계 복원 및 남북경협 재개를 위해서는 재개의 단계를 고민하는 속도 조절도 필요
 - 남북경협의 근본적인 목적은 단기적으로는 남북관계 개선을, 중장기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경제강국 구현에 도움이 되는 것임
 - 경협을 통한 북한 시장화 촉진으로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유도하면서, 변화가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bottom-up 방식'의 단계적 추진 목표를 수립할 필요
 - '한반도 新경제지도' 실현을 위한 과제로는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은 물론,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등 남북간 기추진 및 기합의 경협 사업에 대해 우선 검토 가능

- ④ **국민적 공감대 제고 노력 강화** : 남북간 합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남북관계 개선 및 경협 재개가 한반도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 노력 필요
- 남남갈등 해소 및 통일 공감대 확대를 위한 다양한 토론과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야 함
 - 상대적으로 국민적 합의 도출이 용이한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분야부터 시작하여 국민 정서를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사업 재개를 추진
- ⑤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구할 필요** : 대북제재 국면에서 남북경제협력 재개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이해를 구할 필요
- 남북간 민생협력분야인 남북경협 재개가 추진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이해를 구할 필요
 - 특히 남북경협 재개가 한반도의 긴장 해소 및 정세 안정을 견인하며 동북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주장
 - 또한,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근거로 안보리 제재위원회로부터 의무면제(waiver)를 받는 방안 고려

이해정 연구위원 (2072-6226, hjlee@hri.co.kr)

이용화 연구위원 (2072-6222, yhlee@hri.co.kr)